

제347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2016년12월2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4시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의 대리출석과 여성가족부장관의 오후 5시 이후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마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태에 국회의원의 한 사

람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깊은 반성과 함께 구 체제를 청산하고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자기 혁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황교안 총리는 총리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는 게 의무라는 거 잘 아시면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한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신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권한대행이 모두 여덟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회에 왔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된 요청을 하였고 또 총리로서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제 판단을 또 해 가지고 거듭해서 여러 숙고 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시면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헌법 62조 2항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웅래 의원 자청해서라도 국회에 나와서 협조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사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로서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대통령 잘 보좌 못 한 책임 큼니다.

○노웅래 의원 ‘황교안은 공범이다’, 촛불민심은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범의 의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공범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노웅래 의원 헌법 7조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있지요? 무한 책임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는 행정 각 부를 지휘·조정합니다. 총리 직속으로 공직자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최순실이 국정을 사유화하고 각 부처 가리지 않고 나랏돈 다 빼먹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들을 다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 어제 최선을 다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촛불집회에 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촛불집회라기보다도 광화문 그 상황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노웅래 의원 촛불민심을 느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웅래 의원 앞으로 촛불민심 수용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고 있

습니다.

○노웅래 의원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은 탄핵된 박근혜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를 비롯해서 내각 또 전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연장선은 아니지요? 연장선입니까?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지요? 다른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그래서 ‘촛불민심을 느끼시냐, 들으셨냐’라고 여쭙 본 겁니다. 연장선의 정부인지 아니면 촛불민심을 느끼고 듣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는 ‘필요한 인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한대행 첫 인사로 마사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인사입니까? 그렇다면 국립대 세 곳의 총장이 지금 공석으로…… 2년, 3년 이렇게 공석으로 있습니다. 바로 인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석이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 우려가 되는 보직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마사회 같은 데도, 중요하지 않은 데도 인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2년, 3년 공석으로 있는 총장, 바로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여쭙 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보직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에게도 가급적이면 공

백이 안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의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예시…… 하실 것은,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하는 거라면 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개개 자리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따져 봐야 될 것이고 판단해서 하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웅래 의원** 원칙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식이거나 빈자리가 장기화 돼서 그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거기도 그런 사유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되 원칙에 맞는 인사는 하는 것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런 원칙에 따라 한다면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뜻이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노웅래 의원** 마사회가 이삼 년 동안 공식이 된 총장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장 인사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쭙본 거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특정 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국정 공백 메꿔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또 민생에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선 이런 분야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좀 기분 좋게, 신나게 할 수 있는 말은 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총리께서는 고건 권한대행 때처럼 국정 혼란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결정 신속히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의향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 사법기관들입니다. 이 사법기관들은 여론도 물론 파악하고 법리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아마 요즘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여러 방향의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진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요청하는 것 검토하시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노웅래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답변서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대통령이 재벌 총수 불러서 직접 돈 요구한 것 이것을 ‘문화융성을 위한 선의’라 했고, 최순실 회사에 준 특혜는 ‘중소기업 지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결서에 대해서도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 동의할 수 없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자존심상,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 사임하겠다’ 하고 해야해서 정말 연민의 정이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끝

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버티니 이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대통령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이런 대통령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범법자, 도둑대통령은 처음이지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수사 중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 중입니다. 그 결과를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촛불민심 좀 들으시고요,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느끼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반영을 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정유라 부정 입학 특별감사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지시해서 남궁곤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해서 부정 입학한 것인데, 그렇다면 최경희 총장은 누구한테 부탁받은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모르는 겁니까, 숨기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사항도 아닙니다.

○노웅래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임의롭게 통화할 수 있는 대학총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최경희 총장이고요.

그래서 이대 특기생 모집 면접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희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유라를 잘 봐 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대통령이 부정 입학을 로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확인 못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노웅래 의원 확인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 최순실의 로비가 대학 재정지원에까지 미쳤습니다. 순천향대는 올 한 해 교육부로부터 특혜지원 논란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보다

50억 더 많은 23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순천향대 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것들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대학을 선정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재정지원 사업이 는 것은 지난번에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노웅래 의원 선정이 엉터리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천향대는 올해 대학특성화 사업에서 충북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순천향대 봐주려고 평가점수가 높은 충북대는 떨어뜨리고 순천향대는 붙여 준 겁니다. 이거 찍어 주고 봐준 겁니다.

이유가 뭐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웅래 의원 전혀 그렇지 않은 게 평가점수에 나온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사업별로 다 합쳐서 24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학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요.

부하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부하 직원이 평가한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노웅래 의원 점수가 2개일 리는 없잖아요? 점수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해서……

○노웅래 의원 더 낮은 점수인 순천향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점수가 더 낮은 대학이 높은 대학보다……

○노웅래 의원 그러면 지금 제 말이 맞다 그런

다면 책임지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책임지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노웅래 의원 분명히 이것은 교육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수가 높은 대학이 떨어지고 낮은 대학이 선정이 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향대는 올 6월에 최순실과 친분이 두터운 딸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인 하 모 씨를 개인 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 자격미달자임에도 정교수로 특혜 채용을 했습니다. 담당학과도 없는 동아리 담당 교수입니다. 특이한 교수지요.

순천향대는 정유라가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교수를 제주도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출산을 도와줬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과 재정지원사업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노웅래 의원 재정지원, 이 특혜 의혹 다시 한번 조사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아까 평가점수 엉터리로 했어요. 확인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국정교과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초 보급될 국정교과서,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웹전시에 전시된 국민의견 중 찬성 의견은 1.4%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6개 교육청이 동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내년 3월 신학기에 역사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23일까지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다음 주에, 다음 주 중에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지금 방향이 안 켜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노웅래 의원 웹전시에서 찬성이 1.4%라는데도 방향이 안 켜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웹전시의 찬성이 1.4%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찬성이 30%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런데요? 그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그대로 갈 수 없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노웅래 의원 고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내용은,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들어가시지요.

총리, 나오시지요.

비선실세 정윤희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하고 7억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것은 현대판 매관매직입니다.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직 부총리급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밖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누군지도 얘기된 바가 없고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제시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웅래 의원** 감사원장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의 명예를 굉장히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정윤희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실 규명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해야 될 내용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거 중대한 문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같은 고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노웅래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지지요.

방통위원장 나오시지요.

법관 사찰, 대법관 임명 로비,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로비하셨다면 모른다는 것은 뭘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법관 사찰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웅래 의원** 아무 일 없었습니까? 로비한 것 없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전혀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미래창조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내용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유료방송 전체의 규제 체제를 개편을 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지역 SO 방송사업자들

을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는 계획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체 유료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웅래 의원** 제도를 개선하는 게 결국에는 SO 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해 가지고 통폐합, 결국은 IPTV로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일원화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SO의 권역 폐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 그것을 포함해서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지금 미래부에서 만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지금 유료방송 허가 동의권 갖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아셔야지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의견을 전달을 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것은 지금 SO 지역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해서 통폐합해서 결국에는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래서 전국적으로 SO의 권역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할 단계가 아니고,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지역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쟁 과열로 인한 부실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지 지금 발전방안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종목표는 미르와 K스포츠가 아닙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수조 원의 방송광고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출신 미래창조부 김용수 실장이 총대를 메고 연구반을 구성해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한다’ 이게 계획입니다.

방송플랫폼을 IPTV로 통합해서 이를 통해서만 TV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KT, SK,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운영 통신사만 잘 컨트롤해서 내년 대선에서 방송보도도 통제하고 방송광고 시장도 장악하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차은택은 방송광고 시장 장악을 위해서 착착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수석이 KT에 압력을 행사해서 광고 총괄본부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혔습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등 여러 개의 광고기획 유희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며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 포레카도 강탈했던 과정은 거대한 음모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셨지만 유료방송 발전방안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면 안 됩니다. 허가 내시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문제 있지요? 강행 추진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들어가세요.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5200억 지원하도록 결정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것은 이미 시행을 해 온 부분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렇다면 북측에 강제 몰수된 북한 내륙 투자기업, 금강산관광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언제 지원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도 지금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이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언제쯤 하실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협의를 진행되는 대로 그것을 해 나가고, 저희도 기업 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개성공단은 하고 내륙 기업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것은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내륙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상반기 중에 할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빨리 조치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들어가십시오.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적폐의 중심에 있는 삼성 장충기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연장해서라도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권 전체가 반개혁·정경유착 비호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에 상처받은 국민들은 우리가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부패, 반기득권, 반특권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갑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함께 민의의 전당에 있다는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러 관련 당사자의 잘못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우리 새누리당이 미리 인지하고 좀 더 깨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바로잡았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과 죄송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촛불민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특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보여 주신

분노가 어떤 불상사 하나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광장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현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국정조사, 법원의 재판 등 본격적인 조치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시위 현장에서 이제는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큰 변화와 경제의 어려움, 민생·안보 문제 등 너무 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IT와 인공지능의 초연결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챙기고 선도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갈 수 있도록 협치하고 합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면 이제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서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 생업에 전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정쟁과 당파 싸움 등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빼앗기거나 국제 경쟁에서 도태된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당리당락을 떠나서 촛불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국가적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을 비롯해서 국정 시스템을 과감하게 쇠신하고 혁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권한대행께서 잘 나오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과거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단순히 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헌법이 위임한 법적 지위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도 나와 계신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이런 안보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을 확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한대행께 우선 국정 리더십의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책무를 갖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럼에도 여야 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와 논쟁이 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규정이라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말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외교안보상의 권한 행사나 인사권 행사,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새삼 논란이 되거나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 말씀 한번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계의 의견에 의하면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인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절충적인 의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이론적인 문제보다도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안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민생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가 지금 어려워우니까 특별히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더 어려워지는 사회적 약자들, 서

민 계층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빠뜨림 없이 챙겨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인사 부분에 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인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글썽요, 결국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그런 말씀이고 이게 해설이나 무슨 해석이나 학설 가지고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예정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공직 분위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헌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과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국정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이 의지해야 할 그런 든든한 언덕은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정부와 권한대행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공직 기강을 염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전념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의 경우 과도기를 틈탄 해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칠레에 외교관의 성추행, 성추문 사건 등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권한대행으로서 총리뿐만 아니라 그 공직 기강 의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부터 우리 국무위원들은 거의 매일 이런저런 형태로 회의를 하고 협의체를 하고 현장에 나가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공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장차관들도 직원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사례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우리 백만 공직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감찰은 감찰대로, 격려는 격려대로, 또 정책은 정책대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바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게 국가 권력구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하는 시스템의 혁신, 바로 개헌 추진과 같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사실상 누가 추진 주체가 되어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거냐 하는 방법론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개헌 시기와 상황을 들어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헌법의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헌 추진 과정상 국회 개헌특위의 가동과 정부의 개헌 지원 체제 구축과는 별도로 얼마나 국민의 공감대와 참여 폭을 넓힐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또 정부 차원의 개헌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현재의 통치 시스템과 여러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 규정들이 제정된 지가 오래되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회에 개헌특위가 이미 구성되어서 출발이 된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또 연구들을 해 나가는 일을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지원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기 대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정치 흐름과 일정과 관련해 볼 때 내년 12월보다 훨씬 앞당겨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 등 선거 관련 주무기구를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조기 대선 일정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최근 일부 대선 출마 인사들의 언행과 관련해 이것이 과연, 사전선거운동 의혹이나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의지와 소신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본적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중앙선관위나 또 우리 정부조직들에서 필요한 준비들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선거와 관련된 그런 발언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또 수사기관들이 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기관들을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제대로 관리가 잘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번 국정 혼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농정 분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먼저 전국에서 이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공무원과 의사, 방역 관계자, 피해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잘못됐다고 지적된 게 다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고생은 하지만 정부에서 고치고 바뀌어야 할 일은 많다.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이번에도 취약한 것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 혼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늘 지적하는데 초동 조치가 미흡하다, 초기 비상방역체제 가동이 취약하다, 그리고 지방이 잘 움직이지 않고 농민의 협조가 미흡하다, 또 중요한 조치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것을 단계별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하면 막 바로 경계나 심각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계적·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매뉴얼도 제대로 지금 갖춰져 있지 않고, 이게 언제 적부터 우리가 매년 당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백신 관련 준비나 기준이 참 미비하고 또 러시아나 몽골 외국과의 국제 공동협약체 구성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말 걱정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체제를 빨리 가동을 시켜야 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텐데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벌써 과거에 농정 파트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도록 차체에 빨리 우선 현안부터 수습을 하고 정말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대로 된 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다시 추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보완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자꾸 변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늘 옛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대비를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정부가 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 정도로 그냥 되겠습니까?

○**이명수 의원** 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그런 소신에 대해서 제

대로 다시 하도록, 챙겨지도록 한번 좀 더 살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최고의 파트너십이 결국은 농림부장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컨트롤타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마스 총리실에서도 고위급 간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다른 부처들의, 행사부라든지 또 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협력을 모아 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렇게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쌀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농정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입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이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년 전부터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과잉생산, 쌀값 하락, 소득 감소, 직불금 증액 이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데 반면에 농약값, 비료대, 농기계값은 계속 인상되고……

이런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대책과 새로운 노력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 쌀 문제에 관해서는 과잉생산이 됐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을 줄이는,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하나와 생산된 것을 충분하게 소비하는 소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숙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을 줄이려 그러면 결국은 경작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작목을 경작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에 관한 것은 또 농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쌀 생산을 줄여 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것을 사료로 쓰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면서 쌀 소비처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재고에 관해서는 금년에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말씀한 대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갑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병 출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일등 국민임을 세계인 앞에 증명했습니다. 부끄러운 지도자가 땅에 떨어뜨린 국격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12월 9일 국회는 이 자리에서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습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또 국회의원의 80%가 탄핵의 가결에 동참했던, 정확하게 민의와 국회의원의 의사가 일치했던 대의제도의 기능이 빛을 발한 장면이었습니다.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사실은 국민의 힘으로 발의했고 국민의 힘으로 가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입니까, 총리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대행으로서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헌법과 법에 정한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 탄핵된 대통령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하는 자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그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입니다.

○정동영 의원 헌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총리의 입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보필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리는?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동영 의원 왜 탄핵된 대통령을 대행하느냐, 주권자인 국민을 대행하느냐 했을 때 자신 있게 국민을 보필하고 대행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게 바로 황교안 체제의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비교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정동영 의원 그 말이 성립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탄핵되고 황교안 체제 아래에서 12월 1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청와대를 방문조사하려 했습니다. 황교안 체제 아래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입니다. 황교안 체제는 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의 이런 수사에 협조하시겠습니까, 또 거부하시겠습니까?

(정세균 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황교안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서를 판단해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 실무적인 검토가 아니라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검찰 수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까, 아니면 방해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 등은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협조한다는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황 총리는 세월호 수사 당시에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수사 검사들이 해경 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외압을 넣은 사람이 법무장관 황교안이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동영 의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증언을 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서 증거를 댄다면 여기에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정동영 의원 한겨레신문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어쨌든 실제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나타나면 오늘 이 발언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외압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법무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휘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법을 위배한 총리는 탄핵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것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외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검 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전부 다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정동영 의원 어쨌든 이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황 총리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 처음에는 거부하셨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위급한 국가안보 상황 속에서 시급하게 챙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만일 특검 수사대상에 오르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게 되지요. 그때는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정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정동영 의원 저는 황 총리의 발언이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 23일 그 자리에서 황 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다. 유언비어는 의법 조치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들을 퍼뜨리는 것은 유언비어이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요……

○정동영 의원 당시에 황 총리의 얘기는 최순실 게이트를 유언비어로 규정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에요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정동영 의원 자, 최순실 관하여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동영 의원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조사 상황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그런 판단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진행된 중간에……

더더구나 저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에 사실이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정동영 의원 국민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순실 사건은 게이트가 아니다, 의혹이 아니다라는 총리의 인식, 국민의 4% 속합니다. 96%의 국민은 이런 총리를 탄핵하지 않고 뭐 하느냐고 아마 느낄 것입니다.

자, 대법원 최종심이 나와야 최순실 의혹을 믿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제가 거듭……

○정동영 의원 1차 수사발표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의 확정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이……

○정동영 의원 사실의 확정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는 또 더더구나 법조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그 이상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제된 발언을 우리 공직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동영 의원 가슴이 아픈 사람의 표정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요.

최순실 게이트를 믿지 않는 황교안 총리를 지금 국민은 총리로, 권한대행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제 마음을 말씀드렸고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최순실 게이트는 어떤 겁니까? 국정농단의 핵심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수사들이 다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확정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 수사발표 때까지는 의견이 없습니까? 황교안의 의견은 없는 겁니까, 총리의 의견은?

○국무총리 황교안 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의원님도 준공직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 헌법에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사실은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세계 각국들은 그랬을 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순서로 대행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대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헌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안 총리께 묻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교체 대상으로 하셨지요. 11월 2일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국회가 신임 총리에 대한 인준 절차를 개시했다면 지금 총리는 권한대행의 자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리에 있어야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전히 또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의결이 되면서 제가 그때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또 요즘 개헌특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고쳐 나가면 될 것입니다마는, 국민들이 권한을 주는 방식은 꼭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 국민의 권력을 주는 방식은, 주권자의 위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대의권력을 위임한 것이고 국회에 위임한 것 뿐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의전에 집중하거나 대통령 권한 행사에 집착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황교안 체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려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촛불을 꺼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총리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지적한 주권자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또 하나, 공안검사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총리로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직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고 책임이 없고 그리고 외압을 한 적이 없고 부끄럽지 않다, 다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저는 양식이 있는 지도자라면 이 순간에 총리 스스로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에서 분출한 국민의 요구는 탄핵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 가운데 가슴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빌딩 담벼락 아래 땅바닥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도시락에 싸 온 김밥 그리고 보온병의 따뜻한 물을 나누어 마시던 장면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녀들이 시위 현장에 나가려면 가지 말아라, 그 시간에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을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딸들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와서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가슴속에 담겨 있는 열망은 무엇이였을까요?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참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헬조선, 흙수저, 개돼지,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국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 엄중하고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국회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태평합니다. 저는 비상 국회, 개혁 국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그러나 권한대행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정상시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한 비대위, 민생경제비상대책위원회·안보외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MF 위기 때 비대위가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했습니다. 경제비대위는 경제부처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를 독려하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외로 격랑이 일고 있는 이 동북아 환경 속에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이익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

니다. 안보외교비대위, 2개의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역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의 과실은 군인들이 가로채 갔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과실은 정치인과 재벌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은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30년이 지났더니 국민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나라의 국민으로 남았습니다.

3·1 운동 때는 국민의 10%, 200만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의 한 획이었습니다.

자, 이번 겨울 혁명, 11월·12월 대한민국 국민의 6분지 1, 8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3·1 운동을 능가하는 이 국민적 에너지를 올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그치게 해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제는 국민과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재벌 개혁, 검찰 개혁, 개혁 과제들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근본질서, 헌정질서까지를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과 협치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정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주 동남을 지역구 주민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 여러분,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국회는 탄핵으로 절반을 회복했지만 민주주의 이단세력의 도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구조의 위기입니다. 재벌 중심의 특권 경제는 민생경제를 파탄냈고 실패한 외교와 대외적 경제환경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예고합니다.

셋째, 북핵 위기는 갈수록 가중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병풍 뒤로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이라는 한국 경제의 비상구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위기입니다. 실패한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안보 정책을 잘못 운용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시간을 최대한 유예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사드 배치의 결정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4차·5차, 한 해에 핵실험을 두 번 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스물네 번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단기간 내에 증대하고 있는, 증대할 뿐만 아니라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이런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던 중에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영 의원** 한마디로 북핵 위기,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인영 의원** 그런데 그 사드 배치 결정이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하는 것과 한중 갈등, 수도권 방어 무용론과 군사적 효용성 논란, 북핵을 부정하면서도 인정하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논리 그리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한다, 또 성주 등의 사례처럼 한국 내에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여러 걱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한 여러 판단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은 금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걱정과 우려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

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에도 우선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은 국가의 역량을 집결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이런 우선순위의 배치에 있어서 사드가,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안보를 위해서 나머지는 희생해도 좋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제가 쓰는 일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이인영 의원 안보를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나머지 문제는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병행해 가지만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같이 채워 나가야 된다……

○이인영 의원 당연히 병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능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유능한 안보정책을 펼칠 수 없었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안보관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안보는 군사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새로운 안보이론 중에 그 개념이 인간의 생명·평화 그리고 경제의 문제로 진화하고 확장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여러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오늘 제가 주목하고 제안할 것은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시에도 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도 경제적 고려의 흔적을 저는 우리 정부한테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부처 장관이 NSC에 참여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부터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관에는 경제 문제가 소홀히 되

고 있다는 이런 불행한 점을 지적합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걸러 낸 흔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탁견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런 모든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또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히 북한이 유례없이 집중적으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부는 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NSC에……

○이인영 의원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에 기재부장관도 불참했고 차관의 경우 실무조정회의의 참여 요청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드 배치 결정 시에도 경제수석이나 기재부장관은 불참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2월 10일 사드 배치가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자기도 ‘언론을 통해 보는 게 전부다’ 이렇게 대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NSC에는 구성 멤버가 있습니다. 구성 멤버가 고정적으로 있어서 회의를 계속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부처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들을 해 나갑니다. 또 그리고 NSC에는 우리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입니다.

○이인영 의원 제가 지금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분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들을 또 경제 부처들하고 나누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영 의원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참에 NSC에 경제부처 장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장관이 NSC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질문 해 보겠습니다.

총리는 혹시 개성공단의 부가가치 생산 효과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인영 의원 123개 기업이 5억 불 정도로 볼 때 우리 GDP 생산의 0.04% 정도라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착실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을 꾸준히 지속시켜 왔다면 지금쯤 대략 100억 불 정도로 GDP 생산의 0.6% 이상의 성장요인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궤도의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을 연합하는 수준으로 남북 통일 경제를 실천한다면 1% 이상의 성장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다른 것 하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는 중국과의 교역이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일 큰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든 중국과 원만한 교역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사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역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것이 갈등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더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면 총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인영 의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다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도 계속 마찬가지로 ‘했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범국가적인 그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국하고도 여러 계층의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당국에서 이 사드 문제 때문에 보복을 하겠다, 어쨌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 가면서 사실상의 대응조치가 아니냐라고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국과 중국 문화부장관 회의체가 열렸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중국도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문화 영역의 어떤 제재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세 장벽들을 높여 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상황은 낙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인영 의원 무역 제재, 롯데그룹의 조사, 그다음에 한한령, 관광사업 제재, 이미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범정부적인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사드는 이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 문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의 폐쇄는 10년에 걸쳐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0.5% 끊어 버렸고, 사드는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0.5%가량의 성장동력 감소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부가 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안보정책으로 일관한 오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가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고 또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구조 개혁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부의 가장 큰 역점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불과 몇 분 가면 바로 북한인데 그 앞에서 핵 실험 하고 핵 미사일을 쏘아 대

면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만약 도발로 이어지면, 현실적인 도발로 이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인영 의원 총리는 극단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영 의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능하게,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총리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둘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도 안보를 지키면서도 우리 경제의 타개책들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안보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총리의 대답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입니다.

○이인영 의원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많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잘……

○이인영 의원 어떠한 요인들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 아시다시피 우선 국제경기가 어렵고 또 저유가라든지 이런 자원의 문제도 있고 오래 지속된 구조적인 그러한 국제사회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저희는 저희대로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고 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인력들이 많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조정의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살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들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열면서 지금 타개책이 뭐냐, 조금이라도 길이 뭐냐,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기 위한 여러 루트들을 찾아가고 있고 이것은 꼭 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든 여러 부처가 이제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 안보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면서 각 부처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은 대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출 여력이 사실은 한계에 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길도 만들어 가자, 이런 다각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그런 어려운 경제요인과 중국발 경제위기, 위험요인 이것이 결합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결국 복합적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이 어렵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보시지요.

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위험성 속에서 사드의 위치는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내년 5월에 사드 배치가 확정됐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이인영 의원 일부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이인영 의원 저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매머드급 요인들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5대 취약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철강·조선·건설·해운, 성공하든 실패하든 출혈이 큼니다. 총리는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전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문제 또 그것보다 적지 않은 문제는 많은 해직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문제, 일자리 잃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 그걸 넘어서 10%의 생산 위축만 와도 20조의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의 1% 하락요인이 된답니다. 내년 2.3% 성장 예측하는 데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이 될 겁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내년에도 세 차례 예고됐고 상반기 중에 최소한 한 차례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채 임계치'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정확하게 제가 설명 드리는 어렵습니다만 뜻은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이미 우리는 다 넘어섰습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금리 1%만 인상하면 가계부채는 7, 8조가량 늘고 한계가구 수가 10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뺨 터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가계부채가 지금 1300조를, 거기에 이르고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과도한 이런 측면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제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한국이 관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지금 최근에도 여러 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고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은 경제 보복을 본격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가 어려운 점은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인영 의원**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위협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는 경제의 어려움대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문제 등을 비롯한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이 부분은 또 한시도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할 부분들은 해 나가고 또 같이 병행해 나갈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이인영 의원** 지금 정부의 생각을 고집하면 둘 다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발상을 전환하면 둘 다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인영 의원**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차이나머니가 철수하고 관광객 수도 급감하면 우리 경제의 0.5%가 감소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년 10월에 60조가 넘는 규모의 통화스와프 이런 문제마저 불투명해질 것이고 그러면 유동성의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수단도 하나 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하면서 대처를 경제부처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게다가 재정지출의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재정의 조기 지출로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안보나 정치요인이 발목을 잡는다면, 예컨대 사드가 발목을 잡는다면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재정의 조기 지출 효과 이런 것들은 급감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문제를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금년도의 북한의 핵 도발은 유례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집중돼서 핵 도발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대비할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외에 우리의 정책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하고, 이런 여섯 가지 요인 중에서 총리는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급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요? 다 급하지요, 다 중요하고. 그것을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 최고 정책의 결정권자는 그래도 종합적 판단 속에서 가장 급한 것, 우선순위, 중심적인 것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을 경제부처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저는 사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의 배치는 몇 달, 며칠이 급한 일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는 다른 경제적 요인들에 비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 반드시 배치될 이유도 없고. 그런 면에서 차라리 사드 배치를 유예해서 상반기에 집중될 경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배치가 너무 늦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 글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겠느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문제는 신속하게……

○**이인영 의원** 별개다, 여전히?

○**국무총리 황교안**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배치를 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서 필요……

○**이인영 의원**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듭……

○**이인영 의원** 아니, 그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하지 마시고요, 안보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해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안보 문제는 과거에 없던, 작년 이전에 없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핵 도발이 정말 빈번해지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인영 의원** 그것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인영 의원**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군사·안보적인 대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드 배치도 결정했고.

○**국무총리 황교안** 다 하고……

○**이인영 의원** 그 시간을 조금 더 유예해서 경제적 위기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분산시키자, 그 리스크 해지를 하자,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예요? 그래서 중국발 경제위기를 빨리 끌어오자 이런 말씀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영 의원** 그럼 다시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죽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과제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되,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막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핵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해 앞바다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서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를…… 이것은 안 올 거다, 그것은 정말 너무 안이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부의 정책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이인영 의원** 그것은 고집이지요. 중국발 경제 충격은 우리 경제위기에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고려한 사드 배치 정책으로 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드 배치를 그 기간을 조금 더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북핵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해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간의 갈등을 그걸 통해서 해소하고 중국발 경제위기의 그런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중국에 가서 두 분의 최정상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을 늦춰서 금년에, 내년에 할 것을 2년 뒤에 하겠다, 3년 뒤에 하겠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되 우리의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인영 의원** 혹시 총리의 마음속에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인영 의원 중국에게 북핵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호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중 양강의 틈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북핵을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한국의 능동적 전략에 들어오도록 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해법 이것이 실천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내년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당연히 대선 공약이 됩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이 수준에서 동결해서 차기 정권으로 이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위의 문제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약속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미국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연기나 유예는 과기와 다릅니다. 킬체인과 KAMD를 조기에 구축하면서 미국의 군사경제적 이해를 충족시킨다면 트럼프의 실익 추구와도 저는 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이 년, 이삼 년 좀 늦춰서 중국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또 정책수단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안위는 지금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사드의 문제를 소홀히 평가했다가 내년에 한국 경제 위기에 치명적 위협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주선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국의 혼란을 걱정하고 또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활성화와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우리 정치권이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우리의 행태는 문제가 없는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자성과 자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이 증오를 더욱더 확산·재생산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데 우리 정치권이 한몫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 헌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TF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협의 과정을 지원하고 그걸 참고해서 정부의 할 일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국회의 개헌특위 부분을 보고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광장 민심은 대통령제의 폐해는 결단코 이제는 극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헌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분산하고 새로운 헌법에 경제민주화 또 지방분권 또 여러 가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 총선이나

대선 또 지방선거의 일정 조정 등 이런 모든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여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빨리 헌법 개정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먼저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거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진행 과정을…… 헌법을 여러 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하여튼 정부가 수동적이지 않게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또 권한대행께서 소신껏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망을 꼭 정부조직에 설치할 해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개헌 문제에 동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CBS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저도 그런 보도를 봤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1948년도에 제정된 우리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이 되고 또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 헌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섯 분의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만 대소 차이는 있겠지만 다 불행한 대통령의 과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헌의 시기가 언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의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와 함께 개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단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존경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께서 엿그제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이것은 정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

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20대 국회에서 이 광장의 민심을 담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박지원, 손학규 전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 거의 다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표만이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 대선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을 이제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국민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또한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혁명밖에 없다, 또 대한민국 법치주의…… 혁명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 대행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도 ‘지극히 위험하다. 광장의 분노가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야권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발언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광장의 민의를 국회가 제도권 내에서 수용해야 된다……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는 여론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행께서는 이번 촛불민심을 어떻게 이제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정부도 국민의 뜻을 널리 수렴하고 또 그것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의원** 이제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절차에 따라 권한을 승계한 권한대행자의 퇴진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자제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께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게 오랜 우리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또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면 그 뒤의 절차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한일 군사협정 문제는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양국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존중이 돼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채익 의원** 사드 배치 문제도 이제 정말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본 취지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한국과 일본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이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한미 간에 주고받고 있는 정보자산의 미흡한 부분들에 관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빈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다음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관한 말씀이 계셨고, 물론 그전에도 경제 협력은 여야정에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특히 여당·야당의 의견을 듣고 같이 협업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여야정 협의회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저희들도 다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하여튼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제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이 됐으니까 하루속히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인사 문제 이것은 필연적으로 또 선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연속성 차원에서 인사 문제가 지체된다 하면 이것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인사는 대행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인사권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관한 우려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임기가 끝났거나 공석이 되었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영에 공백이 생긴 기관들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빠짐이 생김으로써 결국 그것이 우리 국가 경제를 살려 나가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하여튼 국민들이 탄핵 정국을 맞아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를 제때 하고 국정을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민국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을 맞아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말 전군을 철저히 장악하고 군에 한 치의 안전사고나 또 기강 해이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그런데 최근래에 보면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또 국방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에 의해서 뚫리고 또 검찰이 외국 방산업체로 군 기밀이 대량 유출된 상황을 지금, 방위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군 관계자가 있었고 또 국군기무사령부 소령의 인터넷 성매매 알선 혐의 등 국가 비상사태에 군의 기강이 정말 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국** 군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어떠한 정치 상황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군에 부여된 기본 임무인 국민과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대에서 그와 같은 안전사고 또 보안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이번 53사단 폭발사고 등은 군에 보낸 우리 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정말 군 기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국** 예, 53사단 127연대 2대대의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는 다 원인을 규명했고, 사실은 각 부대에서 교탄이 연발에 다 쓰고 남은 이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부대에서 그것을 부대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지침이나 요구 등이 있어서 그 대대에서 그것을, 보도된 대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채익 의원** 다음은 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특별회계 방식을 취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대 이전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국** 옥동에 있는 127연대 본부 및 1대대 주둔지는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렇게 해 오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방법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주민 요구에 군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근무지 이탈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시국강연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걸 계속 보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계 기관에서 충분히 또 예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선**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잘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주 북구갑 지역구 주민 15인이 김경진 의원 소개로 방청을 하고 계시고 또 유은혜 의원님 소개로 경기 고양시병 지역주민 다섯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온 국민이 국정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탄핵을 전후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탄핵 이전에는 수시로 뵙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유은혜 의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국정교과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은혜 의원** 여러 가지 얘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으시던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화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혹시 총리께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어디에 와 있다고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의견들이 있고, 아까 교육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죽 열람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의하면 한 60여 %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유은혜 의원**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민심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첫 주에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반대하는 여론이 67%, 찬성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은 접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달 23일까지 죽 현장검토본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의원** 어제 총리께서는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여론을 반영해 주무부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의 판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각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의 또 주무부처의 의견이 아마 일차적인 그런 책임 있는 의견이 될 것이고, 물론 그것은 총리와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지요. 우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 총리, 법률상으로는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된 결정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이런 것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이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고시의 권한이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고시에 결정……

○**유은혜 의원** 고시가 아니고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관련된 결정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고시나 법과, 법과 고시의 절차들을 통해서 교육부가 주무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장관이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일까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이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방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수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예, 내일모레까지 수렴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청와대나 총리의 지시나 눈치 보지 않고 교육부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각 부처의 주무장관들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 됩니다. 다만 또 총리로서는 행정 각 부를 또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것이고 또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보고나 협의라고 이렇게 두루뭇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교육부장관께서는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내일모레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그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은혜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또 교육부장관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중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검토 과정에서 보면 또 사람이 하는 일 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잘 안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그런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의원 제가 확인받고 싶은 것은요 탄핵 전후해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협의의 내용이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런 의사가 총리를 통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압력으로 행사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런……

○유은혜 의원 전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탄핵 결정 이후에는 협의가 없었고요.

○유은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제가 총리로서 또 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에 관해서, 그것을 우리는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역사교과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은혜 의원 잠시만요, 총리님. 역사교과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총리의 판단인데 더 많은 대다수의 국민은 그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께 답변받고 싶은 것은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침해하지 마시고, 간여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지 마시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압박이나 개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은혜 의원 예, 됐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러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총리께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존중하고 교육부장관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시겠다는 국민의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유은혜 의원 국정교과서 국민여론 수렴 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의원 다음 주에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정리가 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거나 혹은 1년 유예를 한다고 했을 때 장관고시를 통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내용은 장관고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은혜 의원**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러면 장관만 결단하면 될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이 경우는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요.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관께서 약속한 것처럼 23일까지 국민의 여론, 민심을 제대로 수렴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부총리로서 그리고 교육부장관으로서 당연히 민심을 따르는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새학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지금 학교 현장의 역사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교육감,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배우지 않겠다, 가르치지 않겠다,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과서를 들어 보이며)

국민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지금 눈

란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 공개된 현장검토본이라는 이름의 역사교과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로, 정말로 문제투성이의 교과서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모두 2018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역사교과서만 201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1년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1일에 수정고시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1년을 앞당기면서까지 추진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직을 맡을 때는 이미 역사교과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중간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져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취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 2017년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먼저 보급하려고 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교과서가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2014년부터 청와대가 이미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 9월 24일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신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의 신념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청와대의 ‘국정 국사교과서 논거 검토’라는 문서를 보면 이미 국정교과서 전환 대응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10월 교육부가 대학로에 설치한 국정화 비밀 TF 문서에는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 이것이 업무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의,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계획되고 추진된 교과서인데요.

장관께서는 혹시 ‘근화보’라는 월간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죄송합니다. 못 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은혜 의원** 이것이 근화보입니다. 근화보는 근화봉사단이라는 단체가 1989년도에 창간한 월간지인데요. 발행인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창

간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매도된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정신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입었다. 오늘날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겪는 중요한 이유는 역사 왜곡에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연출한 국정교과서, 장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경로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형 잡힌, 그런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공과가 균형적으로 기술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은혜 의원 장관께서는 편향된 교과서를 올바르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나온 이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교과서가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미화한 기술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국정 역사 교과서에 보면 화면 속에 보이는 저 사진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꼭 이런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은혜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이 사진은 없습니다.

○유은혜 의원 이 사진 없는 것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유은혜 의원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5·16 군사정변 당시의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유은혜 의원 예, 5·16 군사정변 직후의 박정희 소장의 사진이지요. 군부 독재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재 미화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진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이 사진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진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산업화, 포철……

○유은혜 의원 예, 포항제철 산업현장을 시찰하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면 비중도 많이 바뀌었지요? 역대 다른 대통령들을 모두 합해도 두 쪽 분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량은 아홉 쪽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지금 이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교과서다, 이런 말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유은혜 의원 수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한 오류 투성이의 불량 교과서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기존의 검정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이 그런 부분이 강조된 것은 아닙니다.

○유은혜 의원 다른 부분을 좀 볼까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만큼 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그렇지 않지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읽어 봤습니다.

○유은혜 의원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 간 사람도 많았다’, 장관께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기술이 이것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기술은 기존의 검정교과서보다 훨씬 더 분량이 늘어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은혜 의원 장관,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량은 거의 대동소이하더군요. 그런데 이 관점, 기술이 된 내용이 외부전문가 검토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반영할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번 한국사 교과서에는 작년 12·28 한일 합의가 반영돼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축소되고 표현이 완화되고 그리고 마치 이것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과거의 일인 것처럼 과거 형식으로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12·28 합의로 이미 이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가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끝났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거고요. 더 많은, 사진도 더 많이 추가가 됐고 기술도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 장관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역사학자들이 낸 이 의견서를 충분히 좀 검토해 보시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실투성이 문제 교과서를 교육부에서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의견 수렴한다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자 만드는 데 비용도 7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교육부에서 의견 수렴하려면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야지 이렇게 홍보책자 같은 것으로 여론 호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과서 워크북 원고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정확정보다 신속성을 우선하는 풍조가 존재했다. 이러한 풍조는 안타까운 대형 안전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장관께서는 세월호 대참사의 원인이 신속성을 우선한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것들은 원고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고본에 있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폭 빠지거나 수정을 한 것입니다.

○유은혜 의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워크북은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이 역사교

과서를 집필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진실이 아닌 것을 서술하는 이런 사람이 집필한 역사교과서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아직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국정이라는 발행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실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유은혜 의원 이것은 충분히 듣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정이 불가능한 기본이 안 된 참 나쁜 교과서입니다.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추진된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과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고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박근혜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교과서도 탄핵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정교과서를 탄핵해 주십시오. 내일모레 12월 23일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민심으로 이 국정교과서는 폐기되고 철회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박주선 유은혜 의원 잘 하시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와서 성실히 답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퇴설도 있었고 또 6시에 이석할 것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청난 이 시국 일수록 국민과 소통하는 총리의 모습은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회 출석 이전에 너무 법 조항에 치중한 나머지 경직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총리께…… 법맨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법치가 아닌 인간적인 법치를 해 달라, 인간적인 법치란 국민과 소통하는 법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불통이라는 꼬리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그 시기에는 사라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고 청와대에 대한 지휘 통솔 권한이 황교안 대행에게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청와대에 대한 지휘 통솔……

○河泰慶 의원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국무총리 황교안 지휘 통솔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제가 며칠 전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청와대에 현장조사하러 갔는데요 경호실장한테 거부당했습니다. 경호실장한테 여쭙 보니까 경호실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호실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지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휘할 범위의 일들 또 그런 규모의 일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건의가 오면 제 지시를 내리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의 요구가……

○河泰慶 의원 청와대 직원 중에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직원이 있어서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비서실이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꿀 사람이 지

금 총리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만약 가지 않겠다, 가지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요. 물론 국정조사에 또 국회에 협조하라는 그런 당부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청와대 직원이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연가를 신청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절차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공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국회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직후에 두 사람, 윤전주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선」 하는 의원 있음)

이영선 또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람들입니다. 이영선은 대통령을 잘 모신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전화기를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입니다. 윤전주도 헬스 트레이너인데 홍보·민원 업무로 들어갔습니다.

(박주선 부의장, 심재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화면, 연가를 신청한 날짜를 보면 청문회 출석 요구 이후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연가를 수용한 것이 담당 부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또 경악하는 것은 불출석사유서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서명자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연가를 내고 부서장이 연가를 허용해 주고 도피를 시킨 것입니다.

총리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청문회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회피입니다. 도피를 시켜 준 것입니다. 이 연가를 허용해 준 이 부서장 경질을 요구합니다. 또 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는 데 도와주고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사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그 관련자들을 모두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내용은 제가 명백히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河泰慶 의원** 조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니까 조사하겠다는 뜻이지요?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말과 조사하겠다는 뜻은 같은 뜻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꼭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조사하지 않고 내용 알아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직무정지되어 있는 대통령…… 그 청와대가 도피를 시킨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좃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河泰慶 의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태경 말 조심해!」 하는 의원 있음)

부역이라니요? 부역은……

○**河泰慶 의원** 조사……

명백히 국민이 요구하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시킨 세력이 있고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여 드렸는데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청문회 최순실 사건을 성실하게 조사해야 되는 그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런데 왜 조사는 아니라고 지금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이, 표현이 다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河泰慶 의원** 저 삿대질한 적 없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河泰慶 의원** 총리,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河泰慶 의원** 알아본다는 말과 조사한다는 말이 다른 의미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누구를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河泰慶 의원** 청와대 경호실장이 그날 현장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들었던 근거가 국가보안시설 가급이라고 했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이 시설은 국가보안시설 몇 급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河泰慶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국회도 가급입니다. 그 가급인 국가보안시설에서 우리가 청문회도 하고 대정부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똑같은 가급 시설인데 현장조사가 거부돼야 되는 게 납득이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마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가급 시설인데 국회가 허용이 되면 다른 가급 시설들도 다 허용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아마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총리께서는 그동안 국민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국회가 본회의나 혹은 상임위에서 이 보안시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를 하면 총리

가 성명서를 7일 이내에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안시설 가급이기 때문에 총리도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는 군사시설과 또 군사보호시설로서 내부사항이 노출된다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청와대의 모든 시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河泰慶 의원 군사시설이 있고 군사시설 아닌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시설이 아닌 곳은 청와대 방문 현장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신문입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 때 직접 광주지청에 전화해서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마라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총리께서 법무부장관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河泰慶 의원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월호 때 광주지청에서 해경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러 가는 과정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실무적인 그런 협의가 있고 저에게는 큰 방향만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河泰慶 의원 민정수석실에서 현지 검찰지청에 압수수색하라, 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마 일선 청에 바로 하지는 않고 통상은 필요하면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또 일선 청에서도 필요한 보고는 법무부에 합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민

정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경위를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河泰慶 의원 총리님, 즉답을 해 주세요. 명백한 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즉답을 하기 위해서는……

○河泰慶 의원 조금 전에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해서 지시를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1월 31일 끝납니다. 박한철 소장 지금 한 달 조금 남았는데요. 다음 소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현재 소장의 임기는 사실은 임기가 6년입니다. 6년인데 본인이 처음에 헌법재판관이 된 때로부터 6년만 근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임박해서 아마 본인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판단 뒤에 또 나머지 판단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임기가 1월 31일 끝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임기가 본래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그러면 그때로부터 6년이 본래 임기입니다. 본래 임기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서 ‘내가 앞으로 임기를 다 하지 않고 앞에 헌법재판관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6년 그 뒤에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1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그때로부터 6년이 아니고 그 앞에 헌법재판관이 된 때의 시점, 그때로부터 6년이 내년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임박해서 다시 의사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본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할 용의가 있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법제상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이니까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한 지가 4년 조금 더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니까 소장으로서 2년 임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연장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건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본인이 더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임명할 필요가 없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인사 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별도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河泰慶 의원** 법무부 나와 주십시오.

태블릿 PC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최순실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왜 최순실 것인지.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수사본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었던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때 이미 공보를 충분히 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는 태블릿 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河泰慶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은 이미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도 최순실이 머물렀던 장소에서 그 태블릿 PC가 사용되었던 흔적이 일치되고 또 최순실의 사적인 가족사진 같은 것들이 그 태블릿 PC에 있는 점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 태블릿 PC가 정호성의 증거로는 채택이 되었는데 최순실 본인의 증거로는 채택이 안 된 것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부분에 대한 증거로 쓸 것인지가 최종적으로 다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증거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정호성이 비밀누설을 했기 때문에 정호성의 증거로는 채택이 된 건 맞다 이 말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채택 여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증거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정호성의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은 밝혔나?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이 그런 입증 계획을 공판준비기일에서 설명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런데 어제 보도에서 CCTV를 확인하니까 그 태블릿 PC가 무단 반출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절도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수사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관이 아니라 만약 언론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지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너무 애매한데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건 아니고 만약에……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이번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부분은 없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그건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지네요, 수사기관이 불법은 아니니까, 언론사가 절도를 한 것이라도.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하고서 법무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증거능력이 없는데 증거로 채택할 계획을 가지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아니, 저희가 증거로 검찰에서……

○**河泰慶 의원**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에서 증거로 신청을 했다는, 할 계획을……

○**河泰慶 의원** 아니, 그러니까 증거능력이 있으니까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능

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안 하는 것도 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사법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신중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河泰慶 의원**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를 묻는 겁니다.

검찰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河泰慶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도한 거지만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절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렇습니다.

○**河泰慶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십시오.

좀 전 질의 답변에서 국정교과서 여론 수렴한다고 했는데, 국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원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 목적으로 웹상에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국정교과서 찬반에 대한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이 정부 내에서 국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론도 반영을 할 계획이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접수한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한 63%, 긍정적인 평가가 한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다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부정적인 평가가 63%, 그다음에 긍정적인 평가가 34%……

○**河泰慶 의원** 국정 여부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河泰慶 의원** 그러면 여론을 반영해서 잘 결정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河泰慶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역사교과서보다 이번 교과서가 더 좋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장관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당당하게 하세요. 다음 정권 때 민간인 신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과서를 더 많은 국민들한테 확산시키는 그런 NGO 만드셔 가지고 본부장으로 뛰세요. ‘이게 더 좋은 교과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하여튼……

○**河泰慶 의원** 힘으로 누르지 말고 당당하게 다른 교과서랑 경쟁해서 이기십시오. 그것이 정정당당한 보수의 모습입니다.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이념·역사를 밀어붙이는 게 정정당당한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건 뭐, 교육의 문제를 이기고 지고 하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다수 국민이 국정을 반대하고 있고 또 국정이 다음 정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강행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런 점을 저도 가장 우려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총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번 재벌청문회에서 정경유착의 한 고리가 준조세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분무 회장은 ‘입법을 통해 준조세를 막아 달라’, 최태원 회장은 ‘실질적으로 준조세가 없어진다면 법인세를 더 낼 용의가 있다’…… 준조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 법인세를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이 많은 재벌총수들의 의견입니다.

황 총리께서 준조세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적절치 못한 준조세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힘으로 국민들을 밀어붙이는 보수가 아니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기석 의원의 소개로 광주 서구 지역위원회 17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이정미 의원 어떤 보고도 지시도 상의도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없습니다.

○이정미 의원 민정수석이 탄핵 직전 교체되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민정수석으로부터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상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고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최근에 어떤 것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아니, 국정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필요한 검증에 관한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정미 의원 지난 16일,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이 청와대를 현장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거부됐습니다. 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출입을 거부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정미 의원 지금 청와대 경내 책임자 아니십니까? 청와대 경내 책임자 아니시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경내?

○이정미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마는 그 안에는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지금 청와대 경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경호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또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 또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책임·권한의 총책이 누구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그런 말씀이라면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그렇지요?

이번에 현장조사 거부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형사소송법 110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상황에 따라서 법을 해석할 수는 없고 법은 법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너무 오래 고려하시고 너무 오래 검토하세요, 지금 바로 당장 일어나야 할 일인데.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했

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으로 생기는 국가 피해가 더 크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은폐하는 피해가 더 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어느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아니, 압수수색으로 생기는 피해와 압수수색 거부로 생기는 피해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지금 판단하시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작은 가치도 소중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정미 의원 총리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보안손님은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결국 ‘경내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옹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아마 검토를 별도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오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분명히 청와대 경내 총괄책임자는 총리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경호실에 압수수색받으라고 지시하셔야 됩니다. 지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요구가 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총리가 또는 권한대행이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워져 제게 지휘를 올리면 저도 같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검 수사 받으라고 지시하시겠습니까, 압수수색?

○국무총리 황교안 일단 압수수색 청구가 되어서 영장이 나오면, 그것이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무슨 사유로 하는 것인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정미 의원 사법부가 판단해서 내린 압수수색에 대해서 총리님이 왜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법의 제약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이미 특검은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님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총리는 대통령 방탄대행이 아닙니다.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지난 11월 11일 날 대정부질문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지금 여전히 그 생각은 그대로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 데 제가 더 잘 보좌하지 못한 그 책임이 크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답변하시는 동안 내내 마치 박근혜 대통령하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두 분이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검찰의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 이러면 이것은 범법행위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부당한 외압은 넣으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정미 의원 범법행위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이 범법으로 가는 것이냐, 부당으로 그치느냐 그것은 또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정미 의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부당한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부당한 외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정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까 끝까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사실이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리님이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정미 의원 아니, 그것은 총리님만 알고 계시는 거고, 온 국민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온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이정미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많은 여론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가 물론 없습니다.

○이정미 의원 아니요. 대통령도 최순실도 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의혹은 제기되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이 진위 여부는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부당한 의혹을 받으시면서 총리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의혹을 받으면서요?

○이정미 의원 부당한 의혹을 계속 제기받으면서, ‘당신 범법행위한 것 아니냐’ 이런 제기를 받으면서 계속 정상적인 총리 역할을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의혹이 부당하면 정말 그 의혹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정미 의원 부당한 의혹이라면 진실을 밝혀야 되지요. 그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특검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부당한 의혹’이라는 말씀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아니, 총리님이 부당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지금 특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황교안 대행께서 특검 수사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내각은 탄핵 단두대 앞에서 있습니다.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틴 캐비닛(Guillotine Cabinet)입니다. 국민이 그 단두대의 목줄을 쥐고 있고 국민들이 그 목줄을 놓는 순간 이 내각은, 대행체제는 끝납니다. 따라서 현 내각은 철저히 민심을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국민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선출된 권력이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국회에 출석을 하니 마니 이런 식으로 국회와 기 싸움하는 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국회에 사력을 다해서 협조하십시오.

대통령이 3일 전에 참모들에게 경제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벌과 결탁해서 수백억의 뒤편을 챙기고 민생경제를 최악으로 망쳐 놓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3일 전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정미 의원 며칠 전에 참모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신문 안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 의원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말씀만 하고 다 넘어가시고 제가 준비한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탄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뭘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질문 얘기하시면서 답할 시에 기회를 안 주고……

○이정미 의원 지금 질문했습니다.

가장 큰 불안요소가 뭐니까, 우리 지금 경제상황에?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경제상황, 지금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또 소비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측면 그리고 산업계 각 부문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고 또 동시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경기가 어렵고 또 저유가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려움으로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전문가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각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이 정부 들어설 때부터 4년 내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호전시켰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13일 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예정인데 이 기간 기업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하루빨리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심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헌법재판소가 180일을 다 딱 채워서 판결하기를 바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재판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헌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총리님, 대통령 체제와 권한대행 체제 중 어떤 것이 더 국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더 안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대통령께서 자리를 지키시는 게 안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국정을 이 사태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입니다. 2004년 탄핵 때도 그래서 고건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빠른 심

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하루빨리 탄핵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이고 경제는 세계적으로 위기상황입니다. 총리는 어제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상화의 뜻은 권한대행의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의 뜻입니다. 그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두 번째 현상을 유지하되 불가피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제한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학계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정미 의원** 그중에서, 이것은 다 헌법학자들의 해석인데, 총리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의 권한 범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국무총리 황교안** 제 판단에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 있느냐 이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민생을 챙기는 일,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아니요, 논점 이탈하지 말고요. 권한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만큼의 권한 행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3번처럼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논란이 생기는 부분은 또 그 논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정미 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자인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대통령 체제의 부통령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현상유지 이외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행사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대정부질의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 부득이한 부분,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탄핵된 지 열흘 만에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진 인사가 마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말 때문에 분노가,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이 마사회의 회장 인선하는 것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하고 얼마나, 또 얼마나 부득이한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임명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진행이 다 되던 부분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어 오던 부분이고 또 공석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정의 공백이 없는, 그러나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고,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그래서 '국정의 공백이고 뭐고 그냥 손 놓고 있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정미 의원** 마사회 회장 임명하는 것이 공백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경마산업, 말산업이 지금 권한대행…… 이 정부에서 제1의 국정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여러 정책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또 경제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의원** 총리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치러질 대선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법 시스템이 작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리 필요한 준비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하는 권력입니다. 총리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답변서에도 거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국정농단은 탄핵의 스모킹 건일 뿐입니다. 탄핵의 배경은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분노이고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불통정책 때문입니다.

총리는 외식업체 1위인 이랜드파크의 기업이 4만 4000명 알바 청년들의 임금을 84억 가로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보도가 난 것은 봤습니다.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한 보고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미 의원** 대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 알바들의 등을 치는 사이에 또 다른 재벌인 삼성이 정유라 한 명에게 말 사 주고 호텔 사 주고 106억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살아도 우리 자식들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내 자식 세대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부모님들에게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들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절망을 안겨 준 일입니다.

대통령의 피눈물이요? 지금 국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총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주름 시술을 받으면서 피멍이 들었지만 이분들은 자기 자식들을 백수로,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든 그런 죄로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탄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리님은 박근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책 하나하나를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국가 정책은 이 정부가 새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해 왔던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면밀히 따져서 부정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 내고 또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한류 피해액 13조입니다. 10월부터 중국에서는 공연, 광고 그리고 영화 개봉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익 운운하면서 4월 달에 사드 배치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4월 달에 사드 배치를 한다고요?

○**이정미 의원** 사드 배치를 그대로 추진하실 거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사드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들어서 북한이……

○**이정미 의원** 아니,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핵실험을 두 번 했고 또 미사일 도발을 스물네 번 했습니다. 눈앞에서 현존하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핵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국가의 안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어제 국정교과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부에서 판단을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결과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받아들여서 국정교과서를 중단·폐기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웹 전시 기간 중입니다. 그 결과들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고, 아마 저에게도 보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박근혜정부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성과연봉제,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하실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한 공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민간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불법 이사회로 공공기관 현장 갈등이 극대화되고, 민영화 추진되고, 공공성이 나빠져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불법 이사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성과연봉제, 이 성과연봉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성과와는 관계없이 연공서열에 따라서 시간만 지나면 임금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는 이런 체계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세계 각국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를 엄정하게 하고 또 성과연봉제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다시 좀 도약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어 가면서, 그러나 큰 방향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또 대우를 받는 이런 것이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의원** 박근혜 정책에 대한 총리님의 인식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민은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정책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탄핵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박근혜 정책 강행은 탄핵 거부입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탄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현실조차 무시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반헌법적인 저항입니다. 국민은 이 저항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쇄할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은 최소한의 국정만을 수행하십시오. 더 이상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탄핵이라는 민주적 심판뿐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이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에 국회의원입니다.

2013년 2월 25일 국민 통합을 이루고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박근혜정부, 4년이 되어 가는 지금 몇 가지 객관적 지표와 자료를 통해서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황교안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고려대 정부학연구소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이 매긴 대정부 신뢰도도 5점 만점에 1.79점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불신이 깊어질까요?

몇 가지를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의 무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의 모르쇠,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사실은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올해 9월에 치명적인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피해 구제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봐 주십시오.

재정 당국은 가습기살균제법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보고도 해당 상임위에서 반대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재부는 법사위에서 막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위에서도 관련한 국가재정법이 통과되지 못하

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기금의 설치가 아닌 비슷한 계정인 구제계정을 만들더라도 국가재정 투입에는 반대하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재정 당국의 입장입니다.

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재정 당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드릴까요?

○**한정애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가습기 사태는 가해 기업이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해했는가, 누가 피해를 일으켰는가에 관한 명백한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그런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보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보완해서 가습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그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기업이 폐업을 한 곳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앞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하다면 국민이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정 당국은 재난이 났을 때도 화재가 났을 때도 고용 불안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어떠한 방식이든지 재정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사가 났는데도 재정 투입에 대해서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걸까요?

총리께서는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알아 주시고, 재정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이 생겼다 그러면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또 가해 기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대는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가 재정 투입에 반대를 먼저 하고 나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방식이든지 나중에라도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정 당국이 이 사안을 보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보완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올해 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분들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자, 최저임금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최저임금을……

○**국무총리 황교안**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결정했습니다.

저것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온 2014년도 6월 20일 자의 메모입니다. '6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데 7% 인상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실제 공익위원들은 그때 7%라고 하는 인상안을 내서 결정적으로 7.1%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존재했는지, 공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키고 왜곡시켜 버린 정부가 박근혜정부입니다.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

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자율적인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지금 그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꼭 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정애 의원** 인상률의 결정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에 외부 세력이, 최저임금위원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한정애 의원** 지금 돌아가신 김영한 민정수석을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의 말 바꾸기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거짓말과 허언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통합, 즉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9월 13일 날 노사정 잠정 합의를 한 이후에 당시 김대한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개선 요건과 절차의 마련은 절대, 절대, 절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허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거짓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 노사정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너무 업무를 좀 잘 안 챙기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노동부 일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애 의원** 공직자들이 이렇게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들은 언론을 동원해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

고 뒤로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정경유착과 국정 사유화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3개 재단, 3개 재단에 대해 재계의 출연을 요청하고 반대급부로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되고 난 뒤에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5대 노동개혁법 처리를 요구합니다. 올해 1월 13일에는,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한 다음 날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개혁법 처리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절대, 절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2개의 지침조차도 올해 1월 22일 득달같이 시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동 개혁의 방향은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아닙니다. 재계가 박근혜정부에 요청한 노동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된 항목은 총 12개입니다. 그중에 3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것으로 국내 일자리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뒤로 미룬 것이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을 어떤 방식이든지 했습니다.

문제는 법안은 제출했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법안이 아닌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숙제부터 먼저 한 것이지요.

실제 대통령은 노동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총선에서 얼굴을 못 들 것이라고 국회에다 대고 악담을 퍼부은 적도 있습니다.

재계로부터 받은 돈, 그에 대한 화답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지침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박근혜정부의 실체였습니다. 민낯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한정애 의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공기업에 불법취업시킨 의혹에 싸인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인 작년 여름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봉제 중심 임금 구조는 성과급체제로 바꾸고, 파견을 통한 대체근로를 자유롭게 해 줘서 기업이 노조에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 5법이니 노동 4법이니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재계가 원하는 것은 파견법이지요, 그리고 성과급체제를 활용한 쉬운 해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최소한 법은 지켜 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사 자율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금융위, 노동부를 비롯해서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 동결하겠다. 2017년 임금도 동결하겠다. 직제도 반영해 주지 않겠다, 승진난 것. 승진도 불가하다’라고 협박하며 진행하는 것도, 이것도 노사 자율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드릴까요?

○**한정애 의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금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임금체계 개편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계속되고 또 격차가 커져서 노사정 간에 98년 이후부터 그것을 고치자라고 아홉 번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장관님, 또다시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한정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당 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이 노사 자율인가? 왜냐면 총리께서 노사 자율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개 지침은 절차를 정한 것이고요. 그 절차 안에서 노사가……

○**한정애 의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해서……

○**한정애 의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것은 각각,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진정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지금은 노사 모두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한정애 의원** 노사 자율로 하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임금체제도 바꾸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사자가 노력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애 의원** 합법과 노사 자율이 통하게끔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나 해야 됩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한정애 의원** 어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의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정애 의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셔서 2013년 4월 30일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이 어떤 내용으로 법사위 위원들이 정리를 하셨는지를 한번 읽어 보시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정애 의원**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총리께서는 성과연봉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것, 즉 다시 말해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있음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성과가 없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더 받는 것이고……

○**한정애 의원** 예.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우리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 판례들이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부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가 불이익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불이익 변경 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노사 자율로 법을 지켜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대법원에서 인정된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노사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 방금 보신 판례들이 사회통념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서……

○**한정애 의원** 합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글썄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 그것이……

○**한정애 의원**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다시 한번 판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판례 보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 예, 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내용들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판례……

○**한정애 의원** 일관되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찾아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한정애 의원**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지 몇 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15~29세는 2007년 54%에서 2015년 64%입니다, 청년층 비정규직이.

입만 벌리면 노무현 정부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왜 노무현 정부를 못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일제 임시직이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실업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보다도 낮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절망으로 버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사내 하청 용역업체 파견노동자, 원래 대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을 어떤 것을 보는지 한번 보시지요.

원래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법인세, 부가세, 임금 등을 비롯한 것들을 쪼개기 하청·파견 업체에다가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영세기업들 생겨난 것에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또 지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동부가 현장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현장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다음 자료 보십시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제조부문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도 기형적일 만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만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대부분 가져가는 대기업 중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배당 등을 제외한 최종 이윤에 대한 근로자 보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하고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대기업 노동자를 귀족 노동자라고 하고 동네북으로 만들어서 때리고 있습니다만 대기업 노동자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같습니다.

이 기형적 구조 어떻게 바꾸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통계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한정애 의원** 제가 OECD 자료 보여 드렸습니다. OECD 2016년 자료였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대한민국은 기업과 기업주는 살찌고 노동자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초과이익으로 기업주는 비선 실세의 자녀에게 말을 사 줍니다.

과도한 중소기업, 과도한 영세기업, 이상하리만치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이 영세기업들의 숫자는 사실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외주와 용역, 하청, 파견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는 한에서는 점검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지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박근혜정부 4년, 대한민국에는 국민통합도 국민 행복도 없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으며 비선 실세에 휘둘러 정경유착으로 나라를 도탄에 이르게 한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과정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기에 앞장선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방이 소통이라 생각해서 대면보고조차 없었던 불통 정부였습니다. 그 불통의 구조가 오늘날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 사태에 직면하게 만든 것이며 박근혜정부에 함께한 국무위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닥쳐오는 이 상황은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넘어 진정한 국민 화합 그리고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한정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상북도 구미시갑 백승주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21일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불안민국으로 인식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대신에 광장의 분노가 정치를 이끌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같이 더 잘살 수 있다는 희망과 코리안드림 대신에 좌절과 헬조선이 함축하는 비관적 냉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1970년대 초 베트남과 같은 체제 붕괴나 국가기구가 일대 혼란에 빠지는 혼란 상황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안감을 걷어 내고 희망을 줘야 할 우리 정치권은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DNA가 부활한 것처럼 사분오열되어 협력하는 정치 대신에 상호 협박하는 정치를 지향하면서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불안을 확대하여 종국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정치불안과 경제성장의 차질은 극복될 수 있지만 우리 안보가 무너지게 된다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 아래 불안한 안보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 의원과 사회 일반의 분위기와 관련해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소추의 시간을 앞당겨라, 인용해라, 기각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권한은 물론 없고요. 그것도 일종의 심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삼권분립 체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국가의 헌법체계지요? 헌법정신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백승주 의원 그래서 동료 의원님께서서 헌법재판소의 심의기간을 단축하라고 압력을 넣어라 이런 말씀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은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권한 없고, 권한 없어도 행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승주 의원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더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리님도 그런 권한이 없을 뿐더러 우리 국회의원도 그런 권한이 없고 사회일반도 헌법 심의기간을 당겨라, 말아라, 인용하라, 기각하라 이렇게는 안 되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독립성,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계가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의원 총리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영향력, 압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경우에도 우리 법제는 우리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의견도 그것에 따라서 내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의원** 문재인 대표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은 현재가 촛불민심 또는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려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 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키워드를 헌법 조항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헌법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인데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이…… 기각되면 국민 저항권이 작동한다, 그렇게 작동되는 상황은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항권은 강학상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합리적인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 국정의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그러한 인식과 생각을 어떤 분이 갖고 계신다면 위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 적법절차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의원** 우리 헌법정신에 충돌하는 생각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국정이 헌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의원** 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또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관련되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결정에서도 자세하게 나

왔습니다마는 통진당의 활동도 위헌적이고 또 목적도 위헌적이다,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폭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그 비슷한 내용으로 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명백한 판단은 현재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했고 아마 절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백승주 의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모두가 존중해야 법치국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법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됩니다.

○**백승주 의원** 15년 1월 22일에 이석기 씨에 대해서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은 국민들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백승주 의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중이 참여한 집회에 저렇게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풍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중심 광화문에 오랫동안 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지요.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곳에 몇백 명에서 계속 석방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법질서를, 어떻게 보면 이런 집단행동들은 국기문란 행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석기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16개월이라고 하는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심의를 거치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 또 많은 증거 조사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하고 제 기억으로는 9년 형이 선고된 중죄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이 부분 존중되어야 될 것이고, 아마 개인적으로야 다른 생각을 내심으로는 가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내란선동을 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용인해야 되는 듯한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의원**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위엄이 도전받는다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전받는다 인식하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북한이 직접 파견한 간첩이 최근 검거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백승주 의원**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그 사건에 대해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파해서 오랫동안 암약을 하다가 최근에 검거됐고 또 이렇게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직접 공작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간첩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우회 침투시킨 간첩이 활약 중 검거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 사실을 제가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활약 중인 검거를, 과거에는 직접 파견한 간첩을 검거하면 발표를 해서 사회의 안보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데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발표하게 되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아무리 범법자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대공 수사의 여러 부분들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분명하게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었고 간첩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간첩 Y에 대한 그런 고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안보가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간첩 Y 사건의 전모를 발표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기록이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넘어오고 이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직파간첩에 대한 지금까지의…… 1심 재판도 나왔지 않습니까? 1심 재판도 나왔고 이미 검거 당시에 발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직파 간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조속히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알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안보수사 상황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지금 직파한 간첩은 장기 안전대책을 세워서 군사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과 접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신고하도록 하고 그런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간첩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위해서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예,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록이 넘어오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들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와 계십니까?

법무부차관님, 요즘 인터넷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인터넷에 보면 가장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JTBC가 최초로 보도한 태블릿 PC의 실제 소유주와 언론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획득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백승주 의원** 왜 이것을 명확히 못 밝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명확히 검찰에서

이미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 뒤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차관님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JTBC가 획득한 태블릿 PC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떻게 획득해서 어떻게 방송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사를 지휘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 아니, 특별조사 했는데 조사 이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 안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백승주 의원** 언제부터 검찰…… 한 번 딱 수사한 것을 다 믿고 그래요?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아니,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특검에서도 더 확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특검도 그렇고 이 태블릿 PC 소유와 획득 절차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말씀해 해소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예.

○**백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장관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15년 대비 한 40% 이상 증가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국**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남북간에 심리전을 중지한 04년도 6월을 기준으로 보면 그 수단이나 또 방식, 수준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선전·선동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그 심리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국**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북심리전은 주로 전방에서의 방송을 통해서 심리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전쟁에서 1세대 전쟁은 상비군의 숫자가, 2세대 전쟁은 화력의 위력이, 3세대 전쟁은 기동력이, 4세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임하는 정신적 태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구조에서 우리는 이 심리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점검해서 보강할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4세대 전쟁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전이라든지 테러라든지 또 미디어전, 심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국의 어떤 정치·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또 저항의지를 저하시키고 이래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게 4세대 전쟁인데, 특히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그러한 4세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북심리전 또 테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지난 9월 2일부터 22일 사이에 국방 내부망이 해킹당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PC의 거의 1% 정도가 해킹당했는데 장관님 PC도 해킹당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국** 저는 인터넷망과 국방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 해킹이 누구 것이 됐는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우리의 작전 보안 차원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해킹을 우회적·간접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도발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내에 사이버안보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국** 저희가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을 한 지가 이제 한 10여 년 넘게 되고 있고, 그동안에 사이버사령부도 만들고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국방 영역에서의 전체적인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고 또 지도하는 그러한 기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사이버전도 작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조직을 만들기로 했고, 국방부도 그 필요성은 느낀다마는 그건 또 정

부 내에서 여러 가지 협조할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방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 단위로의 발전은 정부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미래 국방 비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각과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각 군 총장이 유사시에 작전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군령권이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각 군 총장은 군령 계선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각 군 총장이 군령상의 계선에 서도록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소위 각 군 총장을 군령 계선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러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18대 국회 때 한번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어서 총장을 지휘 계선에 포함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휘 계선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국방연구원에 미래 군구조 지휘체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현안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그런 과제들을 잘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의원 장관님,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께서 국방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장을 하셨고 또 그 일환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포함을 해 주셨는데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그 예산이 단일 항목으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방부 전체 연구예산의 풀 내에서 가용 방안을 검

토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트럼프 시대 초기의 가장 큰 한미 안보관계의 과제는 사드를 순조롭게 계획대로 배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치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체계는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결정되고 양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 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이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국민들이 탄핵 심의 기간 중에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와의 다자 정상외교, 양자 정상외교가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내년도 정상외교 계획은 내년 초에 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활발한 외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승주 의원 지난 4년간 외교 분야를 보좌하고 계신데, 4년간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외교적 주요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좀 긴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냉전 종식 이후에 가장 엄중한 외교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또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북핵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엄중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핵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정책이 되었다, 그것이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결의 2321과 지난번에 채택된 2270호가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아침에 미국 트럼프 측의 고위 인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와 또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백승주 의원 장관님, 외교 분야에 가장 큰,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탄핵 심의 기간 동안에

외교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고위 탈북 외교관 태영호 공사의 주요 증언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태영호 전 공사가 최근에 국회 정보위에서 몇 가지 언급을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본인이 공개적인 활동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에 나오면 아마 활발하게 발언들을 하고 자신의 평가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당 대회 등을 통해서 김정은의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또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도 상당히 존재하고 아마 태 공사가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승주 의원** 매년 초 되면 북한이 또 대남 제안을 많이 하는데 탄핵 심의 기간 동안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남 제안을 할 가능성과 내용에 대해서 전망해 본 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항상 신년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실전……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일전선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의 우리 사회나 또 정치적인 불안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주시해서 보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최근에 북한의 최선희 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에 최선희 국장이 미 측 전문가도 만나고 했는데요,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돌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본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트랙2는 트랙2, 말 그대로 트랙2 대화이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트랙2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은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미 간

에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어떤 돌발적인 대화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대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되고 있는 채널이 미국 채널 어디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일단 정부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고요.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또 지금 트럼프 캠프하고도 다양한 접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 인사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채널이 계속 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아무튼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가 트럼프 정부 초기에 제기되고, 의제로서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분단시대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단시대의 시대정신은 통일이어야 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의 시대정신은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이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 이러한 시대정신을 이 땅에 꽃 피우기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한이 직접 파견한 간첩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설마 하는 국민도 계시겠지만 이미 지난 8월에 대한민국 법정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간첩청정지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라 간첩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려고 준동하거나 암약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정치인들은 사색당파로 의심받는 정파적 입장을 탈피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철** 백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을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7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 77만 명의 촛불이 모여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행하는 황교안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촛불 시민은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촛불 시민은 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공안 검사로서의 행적, 법무부장관 시절의 행적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는 탄핵 의결을 통해 정지되었으므로 박근혜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점을 유념해서 촛불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넘는 집회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7차까지 진행된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평가는 어떻게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께서 우리 선진 집회 문화를 보여 주시고 또 국민들의 뜻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비쳐 주신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꽃을 붙이는 꽃벽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역시 선진화된 집회문화를 보여 줬다. 세계 각국도 격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총리께서는 촛불집회 기간 동안 이철성 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가끔 만나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권은희 의원**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황교안 총리가 이철성 청장을 만났고요. 만나서 꽃벽과 관련해서 ‘꽃벽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의 집회장소 허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장소 금지한 것을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인 재청구 같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꽃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꽃’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 집회·시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꽃인데 그것을 제가 얘기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권은희 의원** 그러면 법원의 집회장소 허용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나눴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원칙이라는 것이 경찰의 금지하는 기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집회 관리를 원칙대로 해 달라, 평화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이철성 청장과 집회장소에 대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공안검사의 인식으로 집회·시위를 보고 계십니다. 집회와 시위가 우리 한국 헌법에서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 가치로 보장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버리고 촛불민심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촛불민심이 평화적으로 더 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처벌에 관한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법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안전

하게 관리를 해 달라,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달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지하철을 오르내릴 때도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동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총리께서는 평소 불법적인 집회·시위의 엄단 지시만을 반복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촛불집회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맞지 않습니다.

○권은희 의원 박근혜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사건 두 가지를 한번 꼽아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건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 두 사건 모두, 구속영장 신청과 죄명 적용에 대한 당시 검찰의 의견과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실무적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권은희 의원 두 사건에서……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사건 모두 보면 죄명과 관련해서 실제 수사를 수행했던 검찰과 다른 내용의 죄명을 적용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권한 남용을 하였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윤석열 검사, 세월호 사건의 변찬우 지검장 등에 대한 인사 보복 등을 함으로써 인사권 남용을 하였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은희 의원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했던 것, 검찰의 죄명 적용에 이견이 있었던 것 그리고 수사 지연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인사 보복이 있었던 사실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만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인사 보복이라는 겁니까?

○권은희 의원 윤석열 팀장님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으로 수사를 하시다가 지방의 고검장으로 인사 조치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거 다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권은희 의원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여 박영수 특검에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우 전 수석의 혐의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러한 수사 개입 의혹과 같은 사건들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권 부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뭐가요?

○권은희 의원 공공기관들 인사가 예정되어……

○국무총리 황교안 공공기관?

○권은희 의원 예.

화면 띄워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정된 것이 아니라 임기가 지난 사람들이 있고……

○권은희 의원 예, 공석 또는 임기 도과한 공공기관들 공공기관장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15일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후임으로 전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을 내정하면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총리의 인사 지침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사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돼서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인사 기준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에 거듭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경우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가 비어도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공백이 없도록 해서 결국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기본 방침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은희 의원** 예, 인사권과 관련해서 직무대행의 체제가 각 공기업들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공백이 곧 경영상의 공백을 발생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할 텐데요. 그런 기준으로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거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이 이 기준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인사 결재 제청이 왔고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런 기준이 국회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 그래서 인사할 필요가 있다고 왜 생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인사권이 행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개개 인사들에 대해서 전부 국회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말씀인가요?

○**권은희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인사 요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협의하겠습니까? 또 그런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이 다르고,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견제를 하고 또 조언을 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개개 인사를 협의를 해서 해라, '누구로 할 거냐, 왜 하느냐' 설명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권은희 의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왜 해당하는지를 간략하게 협의하는 절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총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검찰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고 그것은 법무부에서 인사 때가 되면 여러 상황을 비추어서, 또 결원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또 승진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또 지금 인사 대상자들의 구성은 어떤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가 오게 되면 또 제 판단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 그 기준에 대한 협의 또한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참고하신다고 하면 평검사와 관련해서는 가족들의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전학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 고위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병우의 검찰 수사의 모습에서 보셨듯이 검찰 내에 우병우의 라인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 그러한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부분들이 검찰의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행사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박근혜의 권한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대표적인 박근혜의 정책입니다. 이게 진정한 대통령

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사드 배치의 군사적인 효용성 외에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외교적·문화적 영향을 점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책으로 대표되는 사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고려 없이 군사적 효용성만 고려됐고 민주적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 두 이슈는 특정한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사드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아주 빈번하고 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2000km 갔니 3000km 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어렵게 결정하게 됐고 또 한미 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배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안전과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권은희 의원 지금 총리 스스로도 설명하는 논거가 군사적인 유용성 이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효용성 외에 경제·외교·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고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과정이 있었어야 됐고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오로지 군사적 유용성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은희 의원 국가적 안위가 사드 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책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1월에 예정되어 있는 교환계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진행을 중단하시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 부분은 많은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를 이미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에 관한 연구가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컨대 현재 중학교 1종 교과서로 되어 있는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국사의 경우에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 정신을 해석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된 박근혜 정책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권한 대행으로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현재의 결정이 굉장히 장문의 결정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필요한 경우에 또 다른 대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 중에 상당 부분이 편향성과 왜곡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여 곳 이상의 수정 지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고쳐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진이 계속 수정을 거부해서 소송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고, 그 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수정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정의 시스템인데 2년 동안에 걸쳐서 재판까지 거쳐 가지고 그릇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정을 받았지만 필진이 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수정하게 된다면 또다시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공개본이 게시가 되어 가지고 여론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 지금 권한대행의 설명은 박근혜 정책이 일방적으로 정책 강행을 할 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헌법의 이념,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다라는 설명조차 못하는 일방적인 왜곡된 시선의 결정 과정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박근혜의 정책이고, 박근혜의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재정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치소에 계십니다.

김기춘 실장님, 최순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대놓고 물었더니 표변하여 말을 바꾸셨습니다. 주요 공직에 계셨던 분 치고는 너무 초라한 뒷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관료 여러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그 직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역자라는 말에 발끈하셨던 각료분도 있으셨던 것 같지만 충분히 그 이상의 말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정부 곳곳에 손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자유로운 각료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모두 탄핵되어 정당성을 잃은 각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무적 관점에서 지금 그 직에 계시도록 한 것입니다. 국회와의 협조가 아니라 국민의 권능에 기대어야지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런 점을 드러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각료의 각 직무 집행에 필수적인지를 약속받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질의 때 저는 준비한 내용을 다 질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상징적인 것들이 모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43명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내 뱃속의 자식인 양 그 아이들을 다칠세라 조심스레 건져 올리신 잠수사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좌측과 우측, 종사기간 68일·72일, 잠수 39회·48회 그리고 각 79일 입원, 골괴사, 잠함병. 잠함병으로 9일 입원 있습니다.

자, 보상금 어떤 분이 받으셨을까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현재 55명을 심사해서 27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정 의원** 아까 보여 드린 표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퀴즈 내는 것 같이 느껴질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소이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잠함병으로 79일 입원했고 9일 입원한 게 차이라고 하면 차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잠수병, 잠함병의 본래적 속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잠재되어 있고 향후 잠수를 계속할 경우에는 더한 질병으로, 더한 2차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함병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의 분은 7급으로 보상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고요, 뒤의 분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자, 장관님, 보상금 선정위원회가 총 몇 회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예, 소회의 세 번, 전체회의 한번 그리고 시간 총 합쳐 봐야 6시간밖에 안 됩니다. 55명이, 그것도 143명 중에서도 55명이 보상 신청했지만 절반도 안 되는 27명만 보상받았고 사망자 각 2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1인당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고통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자, 이 보상체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여기에서 정당하다 안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느냐면 법은 국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구조법에 보면 보상금을 받으면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다, 저러한 보상기준과 결과는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정당하다 못하다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정 의원** 시체 한 구 건지면 500만 원 받는다든 유언비어 퍼뜨려서 또 다른 상처를 안긴 국가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어떤 민간

인들이 손발 벗고 나서겠습니까? 관련한 조처를 위해서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도 질의응답하고 싶습니다. 대정부질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형사상 검사가 피고인에게 뭔가를 묻고 도망가고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설혹 책임이 주어지고 형사상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답변을 하시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권한대행 직무범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 유지적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정책을 현상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상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포괄적인 허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국정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회와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때에 따라 판단하시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법학을 공부하신 분 아닙니까?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조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국민들께는 어려운 말일지라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상유지와 관련해서는 권위 시와 사고 시를 달리 봅니다. 우리가 법학 서적을 보다 보면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통설 이렇게 나누어 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 의원** 그 가운데에서 권위와 관련되어서는 60일이라는 기간 한정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이견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설은 현상유지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본 건과 같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위가 정지된 것 같은 경우는 사고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형식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은 현상유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심지어 다수설, 유력설도 아니고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상 유의미한 소수견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달리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더 좀 넓은 의미의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재정 의원** 여러 의견이라니요? 제게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정 의원** 저는 법학 서적 몇 개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쉼위와 사고에 따라서 구분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 같이 포함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자, 기본적으로는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적 정당성……

○**국무총리 황교안** 누가 말씀입니까?

○**이재정 의원** 어떤 총리든 대행총리는요.

○**국무총리 황교안** 정당성이 없다고요?

○**이재정 의원** 예, 헌법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정당성이라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리고 헌법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민주적 정당성, 국민적 정당성 이렇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왜 정당……

○**이재정 의원** 선출직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의 그 권원은 이미 탄핵되었습니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황교안**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정 의원**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말장난하러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총리님께서 달리 말씀하셔도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이어야 하는데 사드, 한일 위안부 그리고 역사교과서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총리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현상유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입니다. 진행해 오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 촛불여론이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를 반대했습니다. 촛불여론이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상유지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중단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거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찬반……

○**이재정 의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찬반…… 얘기를 하겠습니다. 찬반에 관한 얘기를……

○**이재정 의원** 가만히 계시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말에 적합한 직무 집행이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다 감안해서 결정을 했던 정책이고……

○**이재정 의원** 감안해서 판단할 만큼의 권능이 없으십니다, 총리님. 그 부분을 오늘 확약받고 싶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얘기를 할까요?

○**이재정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얘기 중간에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길게 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 죽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어려운 그런 국정과제를 세웠고 또 이슈를 논의해서 결정들을 했던 그런 것이 국가안위와 또 우리 민생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지금 한 문장에서 여러 가지가 모순이 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고민은 황 총리님이 하실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현상유지라는 말과는 너무 상반된 얘기입니다.

현상유지, 사전적 의미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그대로 버티어 나가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겁니다. 구멍 뚫리면 살짝 막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민들은 대통령께 맡겨 주십시오. 황 총리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지난번 현안질의에서 황 총리님이 최순실을 지라시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두 번 놀랐습니다. 먼저 일국의 총리가 비선 실세이자 보안손님을 지라시 보고 알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무능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라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능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인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러난 증거는 유능한 거짓말쟁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지라시 보고 알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무능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말씀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정 의원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어느 지위에라도 계시면 백번 양보해서도 책임을 지는 게 고위관료의 온당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직을 내놓으시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관련되고 연루되고 그간 정들었던 대통령님을 변호하고 싶으면 직을 내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요,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없는 야당 의원이지만 저는 국민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꾸벅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님은 말씀을 못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되어 있고……

○이재정 의원 저는 제 무능이 부끄럽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탄핵소추가……

○이재정 의원 왜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못 막았는지 제 무능이 부끄럽습니다.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면 헌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재정 의원 정말 도와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얘기를 좀 끝내게 해 주세요. 얘기를 끝내게 좀 해 주세요.

○이재정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탄핵 이후 2주가 지나도 60만 촛불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당시 이번에 들고 나온 구호는 황교안 탄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총리님을 유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대정부질문, 저와의 답변이실지도 모릅니다.

반성하셔야지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지요. 국회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정도라도 약속은 주셔야지요.

자, 최순실과 관련된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교안 총리의 블로그 글입니다. 2007년 당시 경선 후보들 간에 검증 공방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드셨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선경쟁은 몹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경선경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최순실·최태민 일가의 연관관계였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개인 블로그에 글까지 올리셨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뭘……

○이재정 의원 다음입니다. 2013년 정윤희 문건 파동 사건도 직책은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의원님! 지금 그게 뭘 얘기한 것인지 좀 봅시다.

○이재정 의원 자, 그다음 법사위 속기록 보시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답변을 들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아직 질의도 안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여당 의원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정윤희 문건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정유라의 승마협회 사건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파악도 안 하시고 지라시로 봤다고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증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산케이신문기자 칼럼에 대한 명예훼손 건입니다. 관련

해서도 정 씨를 언급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세 번의 공적인 인지 과정이 있었어야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라시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어떻게 지라시를 보고, 국가를 농단한 사건의 주역을 지라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총리님? 여전히 무능한 바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로 존중해요!」 하는 의원 있음)

세 가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다시 좀 보여 주시지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재정 의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언급하면 보여 주시고요.

자, 총리님의 블로그 글입니다. 본인이 쓰셨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공적으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환기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이재정 의원** 지금 법정 아닙니다. 반드시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블로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그다음에 산케이 공소장 모르신다면 법무부장관 일 소홀히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정윤희 문건 파동 때도 직에 계셨습니다. 관련된 언급 내용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건에 대해서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질문을 못 하게 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세균**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의원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용히 하시고 이재정 의원도 총리께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총리께서도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PPT를 제일 마지막 의전 장면으로 좀 바꿔 주시겠어요, 의전 장면?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코스프레 하느냐는 말에 발끈하셨지요? 첫 번째 장면 보십시오. KTX 플랫폼입니다. 자동차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총리님 내리셔서 KTX

바로 타십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시는 노인분들 보이시나요? 총리님 타시느라고 엘리베이터는 서 있습니다. 충북 오송역 버스승강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혹시 그 권위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차라리 반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셨던 분들 구치소에 계시고, 그 부끄러움을 지금은 느끼고 계십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여기의 각료 여러분들은 그런 뒷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와 관료를 용인할지 아닐지는 국민의 결정입니다. 국민께 맡기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신 모습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의장 정세균**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이천 출신의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통일에 기여했다 하여 나라로부터 지명을 하사받은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사 파동, 농림부장관 탄핵 파동, 급기야는 최순실 사태에 이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을 맞으며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어 낸 우리의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길거리의 촛불과 태극기 물결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밝혀내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헌까지 포함하는 모든 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의 대내외 주변 환경은 자못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조류독감의 창궐과 북한의 안보 위협, 경기 침체와 국제정세

의 변화 등 현안 과제는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번 월요일 날 이천시 AI 방역 현장을 다녀오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번 월요일에도 갔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려 2000만 마리 이상이 현재 살처분되었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대대적인 방역체계 개선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와 같이 확산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보완한다고 많이 보완했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AI가 자꾸 변종이 되면서 이번에 온 것도 H5N6 또 변종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 동원해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당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초기의 안이한 대응이 이 사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키웠다는 것 인정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초기에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방역 관련된 우리 인력, 상당히 부족한 것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이 부족합니다.

○송석준 의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AI 사태로 인해서 피해 농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현행 보상체계, 여러 가지 지원, 현장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농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지원 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했는데

도 피해가 생긴 농가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초기에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효과적인 대응 이런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다른 질의를 통해서 당시 총리님께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가 컨트롤타워 이런 부분도 한번 강조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AI의 발생 현장 그리고 사육농장 전국의 현장 그리고 또 이동경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전국을 상세한 3D 지도를 통해서…… 또 빅데이터, 현재 농가 현황 그리고 철새 이동경로, 다양한 정보들을, 그다음에 차량의 이동 상황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국가적인 이런 사건 사고의 재난 컨트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제가 사실은 현 정부 출범 초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기술적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정보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일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챙기셔서 정말 국가적인 사건 사고 이런 상황 시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이런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다음은 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 전에 계란 약 288만 개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문제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11월 26일 날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계란 출고 시에 세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이러스 잔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를 했고요. 계란 내부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24시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75℃ 이상에서 5분 정도만 가열하면 다 죽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조건을 봐서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H5N6형이 발생했던 17명 중에서도 계란을 통해서 감염이 된 보고는 없습니다.

○송석준 의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H5N6형 AI 였는데 자꾸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변이에 의해서 또 새로운 2차,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변형이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살처분하는 분들, 이런 고위험군 분들한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 물론 그것 말고도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절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같이 감염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고위험군에는 이미 투여를 하고 있고 지금 아주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석준 의원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이것을 충분히 비축해서 대응에는 문제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미플루는 전 국민의 30% 정도가 쓰일 수 있는 한 155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6월 달에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자체나 보건소 이런 데에다가 한 5만 명분은 이미 다 지급을 했었고요 이번 AI 사태에 맞춰서 또 저희가 한 1670만 명분을 해당 지역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현재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AI는 철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으로 감염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운 또 누구

에게나 언제든지 감염 우려가 있는 부분이나까 철저한 대응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철저하게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대국민 홍보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인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복지부장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월요일 날 복지위 상임위에서도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국가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것을 기존의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또 애로를 많이 호소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양로당에 저희가 냉난방비 또 양곡비를 드리고 있고, 그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간에는 사용을, 한쪽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양곡비를 활용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 놔는데 지금 현장에서 운영비도 이것을 좀 탄력 있게, 냉난방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기재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상의를 하고 있고요.

회계하는 것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 회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그것을 지금 회계하는 것을 지원해 드리는 거,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회계 같은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 또 회계 자체를 가급적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작은 것이지만 전국의 6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 관련된 것이니까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란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위 김영란법 시행한 지 85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의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 30일 전후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화훼업이라든가 농축수산업, 음식점업 이런 데와 관련해서 평균 약 40%의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대행님,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런 통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농수축산업 도소매업의 피해는 36%의 매출 감소 또 화훼업계는 무려 매출액이 84%까지 감소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뒤도 되는 건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법은 정확하게는 청탁금지법인데 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를 맑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청탁을 줄이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또 부당한 금품수수를 없애서 맑은 사회가 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전체적으로는 이 법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7, 80% 가까이 되는 이런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시는데, 이제 특정 업역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3·5·10이라고 해서 액수 제한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탁금지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음에 이것을 규제 심사를 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되 또 법이 제정됐으니까 시행을 하되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이제 2018년도에 그동안의 부작용들을 죽 정리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검토해 보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운영자와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김영란법으로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로 문을 닫게 되면 관련 종사자들 또 실업자가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의 감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사회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법으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당겨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스크린 해서 필요한 때 늦지 않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에 당부를 해 놓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3·5·3으로 되어 있는 소위 음식비 그리고 또 선물비 그리고 경조사비 이것을 10·10·10으로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액도 조정해 봐라 또 이런 대안 제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 전후해서는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5·10 이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은 그걸 고수해야 된다, 3·5·10이 아니라 3·3·3이나 3·5·5로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특정 업역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처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윤선 문체부장관님.

김영란법으로 인한 문화예술계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지적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가의 공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계가 언론의 홍보 기회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후원이 축소되는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0월 28일부터는 국민권익위하고 협의해서 언론 홍보를 위해서 발행해야 되는 프레스티켓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를 함으로써 홍보의 어려움은 다소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후원 목적으로 공연에 지원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큰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송석준 의원**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지금 일단 공연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다소 급한 대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공연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여행·관광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다음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질 의드리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미사일, 핵 개발, 상당 수준에 와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타격훈련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가시화되고 있고 현재 북한은 동계훈련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경합식으로 해서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김정음이 직접 몇몇 훈련에는 참여해서 여러 가지 대남 위협을 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특히 또 HEMP라고 핵전자기파를 통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 첨단무기 대응태세도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오늘 어떤 신문에 그런 기

사가 났는데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폭발하는 방식에 의해서 EMP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내에서는 EMP 공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상, 시설을 다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시설들은 그러한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모든 안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권한대행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 개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추진 상황,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언제 한번 정리를 해 봤더니 규제 개혁한 것이 1만 3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규제가 그 당시로는 6000여 건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규제신문고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누구든지 거기에 규제 애로를 올리면—총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그걸 열람을 하고 관계부처에 또 독려를 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응답률, 소위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수용이 된 것이 초기에는 8%였는데 지금은 40%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많은 규제가 남아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의원** 현재는 총리님이 아닌 권한대행 자격 아니시겠습니까? 보다 더 의지를 가지시고 좀 더 힘을 실어서 규제 개혁 특히 수도권 규제 개선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과 함께 과거 그 어느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중차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복잡한 변수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부분의 노력만으로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경제학의 차선이론의 교훈을 명심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넘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각은 더욱 긴장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자리를 지키시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과 국무위원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 의원(280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희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혜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용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연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중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76인)

강병원	강훈식	금태섭	기동민
김경진	김광립	김도읍	김민기
김부겸	김성수	김성원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정우	김종석	김종인	김종회
김종훈	김학용	김한표	김현권
노웅래	노희찬	문미옥	문진국
민홍철	박범계	박병석	박주민
백혜련	서형수	소병훈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용현	심재권	양승조	우상호
유동수	유민봉	윤영일	윤종오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종명
이진복	이철희	이학영	이해찬
장석춘	장정숙	전희경	정갑윤
정세균	정운천	정유섭	정재호
정진석	정춘숙	조승래	주광덕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운열	표창원	홍영표	홍철호

○산회 시 재석 의원(51인)

김광립	김민기	김병관	김삼화
김선동	김수민	김정우	김종석
김한표	문미옥	민홍철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신용현	심재권
양승조	염동열	오영훈	유동수
유은혜	윤영일	윤호중	윤후덕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정미	이채익
이태규	이현재	정갑윤	정동영
정세균	정인화	조배숙	조승래
주승용	최경환(국)	최도자	

○청가 의원(8인)

박덕흠	박재호	배덕광	송희경
신보라	윤종필	이정현	홍일표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차장	이인용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환경부장관	조경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장관 (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고사항】

○의안 제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관영·민병두·김종회·박선숙·정동영·김삼화·이태규·김광수·박용진·서영교·황주홍 의원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태흠·강석진·박명재·송희경·김도읍·권석창·유민봉·황주홍·이양수·안상수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정춘숙 · 박홍근 · 권미혁 · 박경미 · 양승조 · 강훈식 · 김삼화 · 노희찬 · 남인순 · 강병원 · 전해숙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천정배 · 박선숙 · 김삼화 · 김수민 · 장정숙 · 황주홍 · 박주현 · 정인화 · 권은희 · 신용현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천정배 · 박선숙 · 김삼화 · 김수민 · 장정숙 · 황주홍 · 박주현 · 정인화 · 권은희 · 신용현 의원 발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천정배 · 박선숙 · 김삼화 · 김수민 · 장정숙 · 황주홍 · 박주현 · 정인화 · 권은희 · 신용현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이종걸 · 황주홍 · 서영교 · 박홍근 · 박용진 · 김영호 · 전재수 · 문미옥 · 유성엽 · 안규백 의원 발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성원 · 권석창 · 김도읍 · 김정재 · 박명재 · 박인숙 · 박찬우 · 윤상현 · 이우현 · 이은권 · 정유섭 · 정태욱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성원 · 권석창 · 김영우 · 김현아 · 박정 · 박명재 · 박인숙 · 서청원 · 윤상현 · 이우현 · 정유섭 · 조훈현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성원 · 권석창 · 김도읍 · 김정재 · 박명재 · 박인숙 · 박찬우 · 서청원 · 윤상현 · 이우현 · 이은권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서영교 · 강창일 · 조배숙 · 박남춘 · 김상희 · 김중훈 · 서형수 · 박재호 · 안규백 · 윤후덕 · 손혜원 · 고용진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서영교 · 강창일 · 조배숙 · 박남춘 · 김상희 · 김중훈 · 서형수 · 박재호 · 안규백 · 윤후덕 · 손혜원 · 고용진 의원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관영 · 황주홍 · 권은희 · 이동섭 · 박용진 · 신용현 · 장정숙 · 이종걸 · 민병두 · 김중로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윤상직 · 권석창 · 윤종필 · 함진규 · 민경옥 · 박명재 · 박덕흠 · 정유섭 · 이채익 · 안상수 의원 발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성원 · 권석창 · 김도읍 · 김정재 · 박명재 · 박인숙 · 박찬우 · 윤상현 · 이우현 · 이은권 · 정유섭 · 정태욱 의원 발의)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손금주 · 최경환(국) · 이용주 · 신용현 · 이동섭 · 장정숙 · 오세정 · 김광수 · 김관영 · 주승용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이학영 · 윤영일 · 이재정 · 박광은 · 문미옥 · 남인순 · 이춘석 · 이원욱 · 고용진 · 양승조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신상진 · 추혜선 · 이종명 · 함진규 · 박정 · 김종태 · 송희경 · 황주홍 · 박대출 · 박인숙 의원 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성원 · 권석창 · 김도읍 · 김정재 · 박명재 · 박인숙 · 박찬우 · 윤상현 · 이우현 · 이은권 · 정유섭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서영교 · 조배숙 · 박남춘 · 김상희 · 김중훈 · 서형수 · 박재호 · 윤후덕 · 손혜원 · 고용진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윤영석 · 권석창 · 김도읍 · 박대출 · 박맹우 · 원유철 · 윤한홍 · 이채익 · 정진석 · 홍철호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곽대훈 · 정유섭 · 윤영석 · 강길부 · 김정재 · 이우현 · 김석기 · 장석춘 · 김승희 · 조훈현 · 이철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문미옥 · 박정 · 추혜선 · 박광온 · 강창일 · 김정우 · 이원욱 · 박홍근 · 서영교 · 고용진 · 윤소하 · 신창현 · 위성곤 의원 발의)

전기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이훈 · 정인화 · 신경민 · 박정 · 김성수 · 신창현 · 우원식 · 황주홍 · 문미옥 · 김종훈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박광온 · 김해영 · 문미옥 · 이춘석 · 김정우 · 백혜련 · 민병두 · 서영교 · 김현미 · 이찬열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동철 · 도종환 · 이동섭 · 김현아 · 김수민 · 신용현 · 황주홍 · 박지원 · 주승용 · 김영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성원 · 권석창 · 김도읍 · 김정재 · 박명재 · 박인숙 · 박찬우 · 서청원 · 윤상현 · 이우현 · 이은권 · 정태옥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박광온 · 김해영 · 문미옥 · 이춘석 · 김정우 · 백혜련 · 민병두 · 서영교 · 김현미 · 이찬열 의원 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김현권 · 인재근 · 서영교 · 전해숙 · 서형수 · 김영호 · 윤후덕 · 김경협 · 김정우 · 김종훈 · 우원식 · 이용득 · 최인호 · 이학영 · 박선숙 · 박정 · 김민기 · 김경수 · 홍문표 · 김현미 · 김해영 의원 발의)

새마을도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박준영 · 주승용 · 황주홍 · 신용현 · 김수민 · 윤영일 · 정인화 · 김경진 · 이용주 · 이개호 · 김성식 · 손금주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6. 12. 20. 전현희 · 이훈 · 안규백 · 김정우 · 김영호 · 추혜선 · 전해철 · 정성호 · 노웅래 · 박찬대 · 채이배 · 황주홍 · 박정 의원 발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16. 12. 20. 정부 제출)

이상 3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청원

(2016. 12. 20. 윤봉근 외 122인으로부터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